

북 다녀온 양대노총 위원장 “금강산 통일노동자대회 추진”

내달엔 평양 10·4공동선언 기념행사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노동 존중돼야 남북 차이 좁혀”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노동법 연구 등 교류 준비해야”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 노총 사무실에서 <한겨레>와 인터뷰하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 국노총 사무실에서 <한겨레>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의를 이어가자고 이야기했는데, 이를 좀 더 구체화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앞서 남북 노동자 단체는 8월 11일 서울 상암동 월드컵경기장에서 ‘남북 노동자 통일축구대회’를 연바 있다. 대회 기간에 60여명의 북한 노동자가 서울을 방문했다.

남과 북이 협의 중인 사업은 이밖에도 ‘조국통일을 위한 남북노동자회’ 복원과 ‘판문점 선언’ 구체화를 위한 남북 통일노동자 대회 개최, 남북 노동자 대표자회의 등이 있다. 통일노동자 대회 장소로는 금강산이 거론되고 있다. 김명환 위원장은 “하루 만에 일정이 잡혀 백두산에 다녀오면서 우리 노동자들도 백두산을 자유롭게 다녀올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조합원과 함께 백두산에 올라 남북이 하나임을 확인할 수 있는 행사를 만들고 싶다”는 바람을 전하기도 했다.

양대 노총 위원장은 남북 노동자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고 짚었다.

김명환 위원장은 “사회주의 국가(북쪽)와 자본주의 국가(남쪽)에서 말하는 ‘노동의 위상’은 서로 다르다. 남쪽에서도 노동존중사회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한다.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는 과정이 있어야 남과 북의 차이를 좁혀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주영 위원장 역시 “노동 현장에서 쓰는 용어나 노동법 체계의 차이에 관한 연구 등 우리 스스로 남북 노동자의 교류에 관한 준비를 충분히 해야 한다”며 “정부 차원의 뒷받침이 있다면 실제 계획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노동계는 다른 분야에 견줘 훨씬 앞서갈 수 있다”고 내다봤다.

홍석재 이지혜 기자 forchis@hani.co.kr

2018년 09월 22일 토요일 A06면 종합

양대 노총 “내달 평양서 남북 노동자 교류 추진”

3차 남북 정상회담 특별수행단으로 평양을 방문하고 돌아온 양대노총 위원장은 21일 “남북 노동계의 활발한 교류로 통일시대를 열겠다”며 10월 중 별도의 남북 노동자 교류 행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역사적인 평양 공동선언을 만들어낸 일정에 함께했던 것 자체가 감격스럽다”며 “대통령뿐 만 아니라 노동계를 포함한 각계각층이 동행했다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또 “노동계도 10월 중 순경 별도로 교류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함께 노동계 대표 자격으로 평양에 다녀온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도 “10월 중에 남북 노동단체들이 평양에서 교류·협력을 위한 실무 논의를 하자고 했다”며 “구체적으로는 2001년 만들어진 ‘조국통일을 위한

남북노동자회’ 복원이나 남북 노동단체들의 산업별·지역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류나 협력 활동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달 8월 서울 상암에서 열린 남북 노동자 통일축구대회에서 채택·발표한 남북 노동단체의 공동합의문을 실천하는 차원이다. 당시 남북의 노동단체는 적절한 시기에 금강산에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 노동자 통일대회’를 열기로 한 바 있다.

양대노총 관계자가 남북 정상회담에서 노동계 대표로 참가, 대통령과 함께 북한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이번 방북에서 양대노총과 북측 노동단체인 직총의 만남은 이뤄지지 않았다. 김주영 위원장은 “6·15공동선언실천과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회의 북측 관계자들을 만나 사회단체 차원의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전훈일 기자

2018년 09월 22일 토요일 A10면 경제

임명장 받자마자 한국노총 찾은 이재갑 고용부 장관

“최저임금發 고용영향 곤 실태조사”

이재갑 신임 고용노동부장관(사진)은 21일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곧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4시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곧바로 서울 여의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찾았다. 취임 후 첫 방문지로 한국 노총을 택한 것이다. 이 장관은 기자와 만나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현장 실태 조사와 별개로 최저임금 인상 영향도 살펴보려고 한다”며 “이미 실태파악 지시를 내렸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지난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도 “최저임금이 한계기업 등 일부 업종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있으나 최근 고용 상황의 주된 원인이 라고 할 수는 없다”면서도 “최저임금이 노동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는 현장 실태

를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고용부 고위 관계자는 “고용지표 통계만 놓고 최저임금 인상 영향에 대한 논란이 많은데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하겠다는 의미”라며 “조사 결과가 나오면 향후 최저임금 속도 조절 여부에 대한 결론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명장을 받은 직후 첫 방문지로 한국 노총을 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양 노총에 순서가 있느냐”며 즉답을 피했다. 한 시간가량 이어진 간담회에서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지난해 5월 문재인 당시 대선후보와 맺었던 정책협약 내용 중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들이 적지 않다”며 “취임하면 꼭 신경써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이 장관은 “앞으로 자주 만나 의견을 듣겠다”고 답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평양회담’ 훈풍에…문 대통령 지지율 60%대 급반등

갤럽 조사서 11%p 올라 61%로

평양 남북정상회담 효과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크게 올라 단숨에 60%대를 회복했다. 갤럽이 18~20일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1일 발표한 조사 결과(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를 보면, 문 대통령의 9월 셋째 주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61%로, 지난주보다 11%포인트 올랐다. 부

정평가는 9%포인트 줄어든 30%를 기록했다.

연령별 긍정평가를 보면, 30대에서 70%로 가장 높았고, 40대 66%, 20대 63%, 60대 이상 58%, 50대 50% 차례로 나타났다. 연령·직업·이념성향 등 대부분 응답자 특성에서 긍정평가가 높았고, 60대 이상에서 긍정평가 상승 폭이 26%포인트로 가장 컸다.

주관식으로 답한 긍정평가 이유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26%) ‘남북정상회담’(14%)

‘대북·안보 정책’(12%) ‘외교 잘함’(8%) 순으로 나타났다. 부정평가 이유는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44%) ‘대북 관계·친북 성향’(14%) ‘최저임금 인상’(7%) ‘부동산 정책’(4%) 등이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6%(+6%포인트), 자유한국당 13%(+2%포인트), 정의당 10%(-2%포인트), 바른미래당 4%-4%포인트), 민주평화당 1% 순이었다. 무당층은 25%

로 나타났다.

한편, 북한이 비핵화, 종전선언, 평화협정 전환 등 남북정상회담 합의 내용을 잘 지킬 것으로 보는지 묻는 말에 응답자의 49%가 ‘잘 지킬 것’이라고 답했고, 35%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했으며, 15%는 의견을 유보했다. 지난 4월 27일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직후에 견주면 북한의 합의 이행 낙관 전망이 9%포인트 감소했고, 비관 전망은 15%포인트 증가했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문 대통령의 최근 3개월 국정 지지율 변화

자료: 한국갤럽



국민일보

포스코 “노조원들 사무실 침입 문서 탈취”

“수사와 별개로 엄정 조치”
노조 “사측, 노조와해 공작”

최근 민주노총 산하 노동조합이 설립된 포스코가 몸살을 앓고 있다. 노조 소속 직원들이 사무실을 무단 침입한 데 이어 사측의 노조 와해 시도 의혹이 불거지면서 노동계와의 갈등이 커지는 모양새다.

지난 23일 노무협력실 직원 3명이 근무하던 경북 포항의 포스코

인재창조원 사무실에 남성 5명이 무단 침입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직원들이 컴퓨터로 작업 하던 내용과 사무실 내부를 촬영하고 책상 위에 있던 문서 일부와 직원의 수첩 등도 빼앗아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2명은 회사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고 나머지 3명은 도주했다가 경찰에 직접 출두했다. 경찰 조사 결과 사무실에 침입한 직원들은 노조 소속 직원들로 밝혀졌다.

노조 측은 “사측이 노조를 왜해 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휴일근무를 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포스코는 “노조에 대해 어떤 선입견도 갖고 있지 않다. 최근 노사관계 상황을 고려해 노사 신뢰 증진과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 방안 마련을 위해 휴일근무를 한 것”이라며 “이들이 자신의 범죄행위는 감추고 마치 노무협력 실에서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포스코는 “사무실을 무단 침입한 직원들에 대해선 경찰 수사와 별개로 사규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임세정 기자 fish813@kmib.co.kr

휴일 특근하며 ‘노조 와해’ 준비한 포스코

사측 “무단침입·문서 절취에 강력 대응”

정의당 추혜선 의원 공개

포스코가 최근 출범한 노동조합을 ‘노동자권익과관계없이 정치적 활동을 하는 강성노조’로 몰아붙인 노무협력실 문건이 대량으로 발견됐다. 이런 논리를 직원들에게 퍼뜨리기 위해 ‘시범 부서를 선정해 조직화’해야 한다는 회의록도 나왔다. 지난 17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가 출범하자 일주일도 안돼 회사가 조직적으로 노조 와해를 시도한 정황이 나타난 것이다. 포스코는 “노조가 문건을 불법으로 탈취한 뒤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있다며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26일 정의당 추혜선 의원실에 따르면 포스코 새노조 간부들은 추석 연휴 기간이던 지난 23일 노무협력 실 노사문화그룹 직원들이 근무하던 포항시 포스코 인재개발원 사무실에서 노조 대응 문건과 직원 수첩 등을 확보했다. 문건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포스코가 현장관리자들에게 배포하기 위해 작성한

노무협력실서 ‘강성노조 공문’ ‘조직적 배포 회의록’ 등 발견

문재인 정부 정책 비판 내용도…새 노조 출범 6일 만에 충돌

것으로 보이는 노조 대응 문건들이 다. ‘화해와 대화의 시대적 분위기’에 역행하는 강성노조’ 등 부정적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문건은 “강성노조가 근로자의 권익과 무관한 활동을 다수 추진하고 있다”며 “특정 단체의 세력 확산이 목적인 노조는 정당화되지 못한다”고 했다. 현대자동차와 현대제철 사례를 들며 강성노조가 국민들의 비판 여론을 불러일으키고 회사 경쟁력에 문제를 일으킨다고 언급한 대목도 있다. 노조 파괴를 엄벌하겠다고 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노사관계에 깊숙이 개입해왔지만 유연하고 효율적 노동시장을 만드는데 있어서는 되레 후퇴한 측면이 있다”며 “진정한 노동개혁 없이 국가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없다는 국제평가기관들의 지적을 빼아프

게 받아들여야 할 때”라고 했다.

‘포스코를 사랑하는 직원의 한 사람으로서 드리는 호소문’은 포스코가 일반 직원들에게 배포하기 위해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문건이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직원 명의로 노조 반대 여론을 자극하는 내용을 적었다. ‘내 삶의 터전인 포스코를 모든 악의 근원으로 만들고 있다’ ‘잘나 가던 기업들이 치킨게임 같은 노사 대결 구도 속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사례를 우리는 직접 눈으로 봐왔다’면서, 노조가 직원들에게 피해를 끼칠 거라는 주장을 담았다.

이 문건들을 논의한 회의 참석자들이 작성한 노트에는 ‘우리가 만든 논리가 일반 직원들에게 전달되는 지 시범 부서를 선정해 조직화해야 한다’ ‘행정부소장 또는 제철소장이 해야, 미션을 분명히 줘야 한다’ 고 적혀 있었다. 새노조를 강성노조

로 몰아가는 내용을 직원들에게 조직적으로 유포할 방법을 논의한 것이다. 추 의원은 “포스코 최고위층의 지시나 동의에 따라 종합적인 노조 무력화 대책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포스코는 노조가 문건을 확보한 경위를 문제삼아 ‘무단침입과 불법 문서강탈’로 규정하려 하고 있다. 포스코는 보도자료에서 “노무협력 실 직원 3명이 임시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중 일부 직원이 무단으로 침입하고 물리력을 행사해 작업 중인 내용과 사무실 내부를 불법 촬영하고, 급기야 책상 위에 있던 문서 일부와 직원 1인의 수첩을 강탈해 도망쳤다”고 밝혔다. 문건 내용에 대해서는 “회사는 자유로운 노조 활동을 보장하고 있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며 “추석 연휴 첫날이지만 노사 신뢰 증진과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 방안 마련이 시급해 휴일근무를 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

포스코 문건에 “노조 반감논리 전파”…와해공작 의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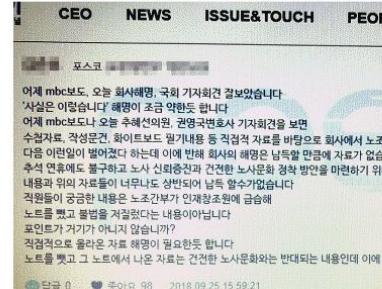
추석연휴 포스코에 무슨 일이

노조 “회사가 노조 파괴문건 작성”
경영진 지시내용 담긴 노트 공개
사쪽 “노무협력실의 일상적 활동
일부 직원 난입해 자료 탈취” 반박

직원들, 실명으로 노조탄압 고발
“직원 매일 하나하나 볼 수 있다니…”
“회사 해명과 공개된 자료들 상반”
“최순실 태블릿처럼 불법 몰아가”

포스코가 최근 출범한 민주노총 산하 포스코지회를 강성노조로 규정하고 반노조 논리의 사내 전파를 지시하는 등 조직적인 ‘노조 와해 공작’으로 의심되는 내용이 담긴 문건과 노트 등이 대량으로 발견돼 파장이 일고 있다. 포스코 임직원들은 회사 내부 게시판에 실명으로 회사의 노조 탄압을 추가로 고발하거나 의심하는 글을 잇달아 올리고 있다.

26일 포스코 내부용 소통채널 누리집 ‘포스코 투데이’의 직원게시판을 보면, 임직원들이 실명으로 포스코가 삼성처럼 조직적으로 노조 파괴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하는 내용의 글이 다수 올라와 있다. 포항제철소 열연부 속초 김아무개 직원은 “언론과 정의당에서) 수첩 자료, 작성 문건 등 직접적인 자료



포스코 내부용 소통채널 누리집 ‘포스코 투데이’의 직원게시판에 올라온 글.

를 바탕으로 회사에서 노조와해 계획을 세웠다고 밝혔는데… 회사의 해명은 납득할 만큼의 자료가 없다”고 비판했다. 전기강판부 소속 직원 씨씨는 포스코가 일부 직원의 폭행을 강조하는 것에 대해 “용기를 내어 말씀드리려 한다”며 “이번 사태를 보면서 최순실 태블릿 (피시) 사건이 떠오른다. … (최순실은) 태블릿이 불법 습득된 것이라며 여론을 불법행위로 몰아가려 했지만, 국민과 법 앞에서 모든 게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포항제철소에 근무하는 이아무개 직원도 “노트에는 매일로 노조 가입을 권유하면 회사에서 직원들 메일을 삭제 가능하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며 “직원들 메일을 하나하나 다 볼 수 있다면 이것 또한 감시가 아닌가”라고 우려했다.

금속노조 포스코지회(지회장 한대정)와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지난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23일 포스코 노무협력실 팀장과 직원들이 포스코 인재개발원에서 노조

무력화 대책을 수립하고 있었다”며 당시 현장에서 확보한 내부 문건과 노트 내용을 공개했다. 문건에는 “강성노조가 근로자의 권리와 무관한 활동을 다수 추진하고 있다. 강성노조는 노동자 자주통일 결의, 사드 해체 요구, 선거 시 특정 정당 지지 등 근로자의 권리 향상과 무관한 활동을 추진 중”이라고 돼 있다. 또 “○○당 정치후원금 지원, 해고직원

복직 등에 대한 의견이 올라오고 있다. 정치권에 휘둘리는 회사를 바로 세운다는 명분으로 직원을 선동하며 노조 설립에 특정 정당이 개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등 노조의 카카오톡 단체방을 사찰한 듯한 내용도 들어 있다. 노조 쪽이 현장에서 확보한 노사문학그룹 직원의 노트에는 ‘우리가 만든 논리(새 노조에 대한 반감 조성 논리)에 대한 전파를 양 제철소의 행정부소장 또는 제철소장의 미션으로 쥐 시범부서를 선정해 조직화하고 일반 직원에게 전달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라’는 내용도 적혀 있다. 추 의원은 이와 관련해 “제철소장은 부사장급이고, 행정부소장은 전무급임을 고려할 때 이들에게

미션을 부여하려면 노무협력실장 차원에서는 불가능하다”며 경영진의 조직적인 지시와 관여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포스코는 “노무협력실 직원들의 업무는 일상적인 활동으로 법적으로 문제될 게 전혀 없다. 노조원들이 사무실에 난입해 직원을 폭행하고 자료를 뺏어 갔다.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회사의 부당노동행위 여부와 일부 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뤄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포스코 노조는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조합원이 1만9천여명에 이를 정도로 강력했지만, 이후 활동이 급속히 위축돼 현재는 유명무실한 상태다.

곽정수 선임기자, 서영지 기자 jskwak@hani.co.kr

‘포스코 새 노조’ 놓고 노사 대립 격화

민노총 포스코지회 16일 공식출범
정의당 추혜선 “사측, 왜해 시도”
포스코 “일부 노조원 문건 훔쳐가”

포스코 노동조합 설립을 둘러싼 노사 양측의 대립이 격해지고 있다. 추석 연휴 기간에 민노총 소속 노조원이 포스코 노무협력실에서 가져간 문건을 두고 정치권까지 가세했다. 정의당이 “노조 왜해 시도”라며 의혹을 제기하자, 포스코는 이를 반박하고 “일부 노조원의 문건 탈취 행위”에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섰다. 포스코는 그동안 사실상 무노조 경영을 해왔지만 16일 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가 새 노조로 공식 출범했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은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 노무협력실 산하 노사문화그룹이 노조 왜해 문건을 작성했다”며 “헌법을 유린하는 범죄행위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이 공개한 문건에는 ‘화해와 대화의 시대적 분위기에 역행하는 강성 노조’ 등의 표현이 있다. 추 의원은 이를 두고 “포스코 최고위층의 지시나 동의에 따라 종합적인 노조 무력화 대책이 마련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포스코는 즉각 “자유로운 노조 활동을 보장하고 있으며, 특정 노조에 대해 어떤 선입견도 갖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추석 연휴 중 일부 노조원이 사무실에 침입해 일부 문건을 탈취해 갔다”고 주장했다.

포스코에 따르면 23일 노무협력실 직원 3명이 근무하고 있던 경북 포항시 포스코인재창조원 사무실에 남성 5명이 침입해 컴퓨터 작업 중인 내용과 사무실 내부를 촬영하고 책상 위에 있던 문서 일부와 직원의 수첩 등을 빼앗아 도주했다. 이 과정에서 저항하던 직원 2명이 팔과 다리를 다쳤다.

도주한 2명은 경찰에 체포됐고 나머지 3명은 도주했다가 나중에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는데, 최근 민노총 소속 노조에 가입한 직원들로 드러났다. 포스코 측은 “적법하게 노조 활동을 해야 하며, 폭력과 절도 등 불법적인 행동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노조 측은 직원들이 연휴에도 근무한 사실에 대해 “노조 왜해 전략을 짜는 중”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사측은 “노사 신뢰 증진과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 방안 마련이 시급해 휴일 근무를 했던 것”이라고 맞서는 등 시각차가 커 양측의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성규 기자 sunggyu@donga.com

노조설립 발표 일주일만에 포스코에 드리운 노사갈등

노조 대응문건 두고 대립

勞 “와해공작” 使 “문서강탈”

포스코에 첫 민주노총 산하 노동조합 설립 발표가 나온 지 일주일도 안돼 노사 간 물리적 충돌이 일어났다.

새 노조는 “경영진이 노조 왜해 공작을 펴고 있다”고 비난하는 반면에 회사 측은 “노조가 회사 문서를 폭력적으로 강탈했다”고 맞서며 노사 간 갈등이 증폭되는 양상이다.

25일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가 올해 들어 노무협력실 산하에 노사문화그룹을 신설했고 이 그룹이 노조 왜해 문건을 작성했다”며 두 종류 문건을 공개했다. 포스코가 현장 관리자들에게 배포하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이른바 ‘노조 대응 문건’은 ‘화해와 대화의 시대적 분위기에 역행하는 강성노조’와 ‘포스코를 사랑하는 직원의 한 사람으로서 드리는 호소문’ 두 가지다. 이에 추 의원은 노조 무력화 대책이라며 “헌법을 유린하는 범죄 행위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스코 사측은 그러나 이런 주장에 강

하게 반발하고 있다. 사측은 “새 노조원들이 타 부서 사무실에 무단 침입해 회사 문서와 개인 수첩을 탈취했다는 사실이 보도되자 자신들의 범죄행위는 감추면서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며 “마치 노무협력실에서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있는 것처럼 호도해 방송과 정치인들에게 제보해 지지를 유도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경찰에 따르면 새 노조원 A씨 등 5명은 지난 23일 포항시 남구 지곡동에 있는 포스코 인재창조원에 들어가 직원 업무 수첩, 기사 스크랩 등이 담긴 서류를 빼내 도주했다. 당시 인재창조원에는 노무협력실 직원 3명이 근무하고 있었다. A씨 등은 서류를 빼앗는 과정에서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였다. 이들 가운데 2명은 차를 타고 달아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포스코 측은 “회사에서는 여러 차례 입장을 밝힌 것과 같이 자유로운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고 있으며, 특정 노조에 대해 어떤 선입견도 갖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노조원들도 적법하게 노조활동을 해야 하며 폭력, 절도 등 불법적인 행동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우제윤 기자

포스코 노조원, 사무실 무단 침입해 문서 탈취

금속노조 조합원 5명 입건 노조 “회사가 노조 와해 공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 포스코지부 일부 조합원이 회사 사무실에 무단 침입해 문서를 탈취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6일 포스코에 따르면 노조 집행위원 A씨(48) 등 5명은 지난 23일 경북 포항시 지곡동 인재창조원에 무단으로 들어가 회사 서류와 직원들 업무수첩 등을 빼

앗아 달아나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인재창조원 사무실에는 노무협력실 소속 직원 3명이 근무하고 있었다. 이들은 추석 연휴기간 중 전기 관련 보수 공사로 본사 사무실 문이 닫히자 이곳으로 옮겨 일했다. 노무협력실 직원들은 임직원 소통강화 방안과 갑질행위 예방 대책 등에 대한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추혜선 정의당 국회의원은 지난 25일 포스코 노조가 확보한 자

료 등을 근거로 “포스코의 노조 와해 공작이 드러났다”며 관련 문건을 공개했다. 포스코가 현장 관리자들에게 배포하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노조 대응 문건들로, ‘화해와 대화라는 시대적 분위기에 역행하는 강성노조’ 등 노조의 부정적 이미지를 부각한 내용을 담고 있다.

포스코 관계자는 “포스코는 자유로운 노조 활동을 보장하고 있고 법과 원칙에 따라 노사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에버랜드 노조관련 재판 위증 정황 수사

검찰, 회사 관계자 곧 소환 ‘계열사로 무리한 수사’ 지적도

삼성그룹의 노조 활동 방해 의혹과 관련해 에버랜드 등 계열사로 수사를 확대한 검찰이 재판 과정에서 사측의 위증교사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26일 검찰과 재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수현)는 최근 금속노조 삼성지회(옛 에버랜드 노조) 관계자를 불러 2012년부터 진행된 에버랜드의 부당노동행위 등 관련 재판 상황을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회사 측 직원들이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했는지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에버랜드 노조가 지난 4월 ‘2012S 그룹 노사전략’ 문건을 근거로 삼성이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며 검찰에 재고소·고발하면서 시작된 사건이다. 검찰은 에버랜드 사측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말라고 회유하거나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등 노조 활동을 방해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지난 17일에는 에버랜드 본사와 안양컨트리클럽(CC) 등을 압수수색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윗선’ 수사를 하던 검찰이 연이은 구속영장 기각으로 인해 수사 성과가 불투명해지자 계열사로 무리한 수사 확대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은 조만간 에버랜드 회사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26일 오전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단식농성장에서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조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불법파견 책임자 처벌과 직접고용 명령 등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철거하라” 귀성도 포기한 비정규직의 외침

50여명 노동청 점거 단식 농성 이재갑 장관, 취임하자마자 난제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조합이 “사족의 불법파견을 법대로 철거하라”며 귀성도 포기한 채 추석 연휴 기간 내내 서울 고용노동청에서 단식 농성을 벌였다. 지난 21일 임명장을 받은 이재갑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난제에 맞닥뜨렸다.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는 26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4층 단식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4년간 방치한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철거 ▲직접고용 명령 ▲당사자(비정규직)와 원청(현대·기아차)의 직접교섭 성사 등을 고용부에 요구했다. 금속노조는 “이번 주 내로 정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금속노조 소속의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지회 소속 조합원 50여명은 지난 20일부터 서울고용노동청 청사 일부를 점거한 채 농성을 벌이고 있다. 조합 간부 30여명은 22일부터 단식에 들어갔다고 노조 측은 전했다. 현대·기아차 불법파견은 14년 둑은 오래된 과제다. 2004년 고용부는 현대차가 하도급업체 127곳과 맺고 있는 9,234개 계약이 불법 파견이라고 판정했다.

원청업체가 하도급 근로자에게 업무 지시를 한 정황이 드러나자 이를 도급이 아닌 파견으로 본 것이다.

이듬해 검찰이 현대차의 파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리면서 고용부 판정은 흐지부지됐다. 그러나 이후 법원 민사소송에서 현대·기아차의 불법 파견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결국 지난달 초 고용부의 적폐 청산위원회인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고용부에 “직접고용 명령, 당사자 간 협의·중재 등 적극적인 조치를 조속히 취하라”고 권고했다. 그럼에도 고용부가 불법파견 판정과 시정명령에 속도를 내지 않자 비정규직 노조가 실력 행사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사측이 비정규직 해소를 위해 나름의 성의를 보이는 상황에서 강제 조치가 최선이 아닐 수 있어 고용부도 고민하고 있다. 현대차와 기아차 사측은 각각 하도급 비정규직 근로자 1만여명, 2,300여명을 순차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금속노조 소속 정규직 노조와 합의한 바 있다. 반면 비정규직 노조는 “사측과 정규직 노조가 주도하는 정규직 전환 계획은 근로자 1명당 수천만~수억 원에 이르는 미지급 임금(정규직 임금과 비정규직 임금의 차액)과 근속연수 인정을 하지 않는다”며 반대한다.

이성택 기자



추석날인 지난 24일 오전 서울 목동 열병합발전소 굴뚝 위에서 고공농성 중인 파인텍지회 노조원들(위 사진)이 농성 현장을 찾아온 동료들(가운데)의 합동 차례를 보며 손을 훔들고 있다.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와 직족들이 26일 오전 서울 종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차린 '현대기아차의 불법파견 처벌 및 비정규직 노동자의 직접고용 촉구 단식농성'을 지키고 있다(아래)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연합뉴스

굴뚝 위에서, 천막에서…농성 노동자들의 추석

굴뚝 위, 국회 앞 농성장에도 추석은 찾아왔다. 추석날인 24일 금속노조 파인텍지회 조합원들은 서울 양천구 목동 열병합발전소 정문 앞에 차례상을 차렸다. 이스플트 위에 차린 차례상 앞에서 차광호 파인텍지회장은 “굴뚝 위 두 노동자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노동자가 살맛 나는 세상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파인텍 노동자인 홍기탁 전 지회장, 박준호 사무국장은 고용승계·단체협약 이행 등을 요구하며 지난해 11월부터 굴뚝 위에서 농성 중이다.

같은 날 현대·기아자동차 비정규직지회도 서울 종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단식농성장에서 사측과 투쟁하다 세상을 먼저 떠

난 류기혁·박정식·윤주형 열사를 기리는 합동 추모제를 지냈다. 노조 대표단 25명은 14년간의 불법파견에 대한 책임자 처벌과 비정규직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지난 22일부터 단식농성 중이다. 26일엔 기자회견을 열어 고용노동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했다.

26일로 324일째 국회 앞에서 형제복지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농성 중인 피해생존자 모임 한종선 대표도 추석날 천막에서 동료들을 맞았다. 한씨는 “군 의문사 피해자 유가족들과 형제복지원 생존자 동료들이 찾아와 음식도 나누며 서로의 상처를 보듬는 자리를 가졌다”고 말했다.

황금비 박기용 기자 withbee@hani.co.kr

최저임금 인상에 내년에만 실업급여 2500억 더 든다

국회 예산정책처 추가 예산 분석

최저임금 연동 제도만 최소 13개

산재 등 포함땐 2800억으로 늘어

올 실업급여 지급액 6조 넘길 듯

고용보험료 추가 인상론도 나와

내년도 최저임금이 10.9% 오르면서 내년 한 해 실업급여 예산만 2500억원 넘게 더 들 것으로 국회 예산정책처가 분석했다. 실업급여액은 최저임금의 90% 이상 주도록 규정돼 있어 최저임금이 오르면 실업급여액도 자동으로 올라간다. 또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자동으로 재정이 더 투입되는 13가지 제도 가운데 출산휴가 급여, 산재보험 등까지 더하면 내년에 2800억원 더 들 것이라는 계산이 나왔다.

◇내년 실업급여 2500억원 추가로 써야
26일 예산정책처가 국회 환경노동위 신보라(자유한국당) 의원 의뢰로 추계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추가 재정 소요(2019년)’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정부는 실업급여액을 2542억원 더 써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정책처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① 실제 인상률(10.9%)만큼 오르는 경우와 ②명목임금 인상률(4.2%)만큼 오른 경우를 비교했다. 여기에 내년도 실업자 전망치와 실업자 중에서 구직 급여를 받는 비율(작년 기준 36.6%) 등을 반영해 이렇게 계산했다. 최저임금이 보통 근로자를 임금보다 가파르게 오르면서 드는 돈을 따진 것이다.

현행법은 하루 실업급여액을 적어도 8시간치 최저임금의 90% 넘게 주도록 규정했다. 올해 실업급여 하한액은 5만 4216원($7530\text{원} \times 8\text{시간} \times 90\%$), 상한액은 6만원이다. 상한액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으로 정한다. 그런데 최저임금 인상으로 내년 실업급여 하한액이 6만120원($8350\text{원} \times 8\text{시간} \times 90\%$)이 되면 올해 상한액을 넘어서게 된다. 이 때문에 시행령

을 고쳐 내년도 상한액까지 둉달아 올려야 할 상황이다.

최저임금을 16.4% 끌어올린 올해의 경우 실업급여 지급액은 ‘역대 최대’ 기록을 계속 갈아치우고 있다. 지난 8월 실업급여 지급액은 6158억원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30.8% 급증했다. 한 달 기준으로 역대 최대다. 올 1~8월 실업급여 지급액은 4조3411억원인데 이 추세라면 올해 6조원을 넘길 전망이다. 작년엔 5조224억원이었다. 상황이 이러니 실업급여 재원인 고용보험료를 올리는 게 불가피해졌다. 정부는 고용보험료를 현재 임금의 1.3%(근로자 0.65%, 기업 0.65%)에서 내년 1.6%로 약 6년 만에 높이기로 했는데, 상황에 따라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정부 안팎에서 나온다.

◇최저임금 연동 13개 급여도 인상

최저임금위에 따르면 실업급여처럼 최저임금과 직접 연동된 제도는 최소 13 가지에 달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 가운데 추계가 가능한 실업급여(2542억원), 출산전후휴가급여(188억원), 산재보험 장해급여·유족급여(82억원) 등에 만 내년 2812억원이 추가로 들어간다고 계산했다. 나머지 9개 제도는 “추가로 돈이 더 들 것으로 보이지만 자료 부족으로 구체적인 액수는 알기 어렵다”고 했다.

최저임금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아 더 써야 할 예산은 훨씬 많다. 예를 들어 정부 예산이 들어가는 어린이집 교사, 노인 요양보호사 등 인건비는 최저임금 안팎으로 정해진다. 최저임금이 오를수록 정부 지원금을 더 줘야 하는 것이다. 이 와 별개로 일자리 안정자금처럼 최저임금 후폭풍에 시달리는 영세 자영업자 등에게 지원되는 예산이 연간 6조원 정도 들어간다. 신보라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밀어붙이다 보니 국민이 짊어져야 할 ‘숨은 부담’이 천문학적으로 늘고 있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국민 부담으로 돌려 막기 하는 셈”이라고 했다. 이기훈 기자

주 52시간 이후... 점심 전후 2시간은 화장실도 못가요

**기업들 점심 전후 ‘업무집중시간’
잡담·스마트폰 등 개인행동 제한
직원들 “야간 자율학습하는 기분”**

경기도 수원의 한 보험회사에서 근무하는 배모(34)씨는 최근 서류를 복사하다 직장 상사로부터 “업무 집중 시간에 왜 자리를 뜨느냐”고 꾸지람을 들었다. 이 회사는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두 시간을 업무 집중 시간으로 정해 직원들에

게 자리를 지키라고 권고하고 있다. 상사는 “급한 복사도 아닌데 업무 집중 시간 끝나고 하라”고 했다. 배씨는 “고등학교 야간 자율 학습 때로 돌아간 것 같았다”고 했다.

주 52시간을 도입하면서 많은 기업이 업무 집중 시간, 집중 근무 시간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야근을 줄이는 대신 점심 전후 2~4시간 정도를 정해 집중적으로 일하자는 것이다. 이 시간에는 동료와 잡담을 하거나 커피를 타 먹는 일, 개인 스



마트폰을 쓰는 것도 제한된다. 하지만 일부 젊은 직장인은 “상사들이 업무 효율과는 상관없는 군기 잡기에 제도를 악용한다”고 했다.

경기도 성남의 한 IT업체는 오전 9시 30분부터 10시 30분까지를 업무 집중 시간으로 정해놓고 있다. 회사 측은 전 직원에게 업무 지침을 보내 이 시간 동안 흡연은 물론 화장실 사용도 자제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직원 채모(31)씨는 최근 업무 집중 시간에 자리에서 일어서 스트레칭을 하다가 상사로부터 지적을 받았다고 한다. 채씨는 “스트레칭 하지 말라는 것은 회사 지침에도 없는데 상사를 눈치만 보라는 것이냐”고 했다.

서울의 한 금융회사에는 최근 업무 집중 시간 동안 양치질 금지령이 내려졌다. 이 회사는 점심 직후 업무 집중 시간이

2018년 09월 27일 목요일 A12면 사회

시작되는데 부사장이 일부 직원이 점심 시간이 지나 칫솔을 들고 복도를 오가는 것을 적발한 것이다. 회사 직원들은 “이 닦는 데 2~3분이면 되는데 너무한다”고 했다.

업무 집중 시간제를 도입한 한 기업 관계자는 “근로시간을 줄였지만 당장 사람을 더 뽑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 직원 스스로 업무 시간에 최대한 생산성을 발휘하고 노력하는 취지”라고 했다. 오후 6 시에는 회사 컴퓨터 전원을 끄고, 야근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결재를 받게 하는 등 기업들이 근로시간 준수에 매달리고 있지만 남은 업무량을 채울 방법은 아직 없다는 것이다.

이영빈 기자

2018년 09월 27일 목요일 A14면 사회

男육아휴직자 71%가 公기관-대기업 직원

‘300만원 이상’ 고임금, 증가폭 급증
저임금 여성 줄어… 육아휴직 양극화

최근 남성 육아휴직자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근무 여건이 좋은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에만 몰려있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났다.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을 쓴 남성 근로자는 1만4735명으로 전년(9681명)에 비해 5054명(52.2%) 늘었다. 남성 육아휴직자들의 소속 사업장별 비율은 대기업 53%, 중소기업 29%, 공공기관 18% 순이었다. 남성 육아휴직자 10명 가운데 7명은 상대적으로 사내 복지 수준이 높은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에 다니는 셈이다.

임금별로도 저임금자보다 고임금 근로자의 증가 폭이 커졌다. 통상임금 기준 150만 원 미만 구간의 남성 육아휴직자(공무원 제외)는 전년

2017년 사업장 형태별 육아휴직자 현황 단위: 명		
구분	여성	남성
공공기관	2만6213(25%)	2693(18%)
대기업	3만9614(38%)	7721(53%)
중소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	3만8466(37%)	4321(29%)
전체	10만4293(100%)	1만4735(100%)

자료: 고용노동부

대비 16.4% 늘어나는 데 그친 반면 300만~349만 원은 89.3%, 350만 원 이상은 76.9% 급증했다.

여성 육아휴직자는 2016년 10만9194명에서 2017년 10만4293명으로 4901명(4.5%) 줄었다. 사업장 형태와 근로소득에 따른 ‘양극화’ 현상도 남성과 비슷했다. 통상임금 150만 원 미만 구간의 여성 육아휴직자는 2016년 대비 지난해 23.8% 줄었지만 350만 원 이상 임금을 받는 여성 육아휴직자는 전년보다 8.8% 늘었다.

김철중 기자 tnt@donga.com

매일경제

2018년 09월 24일 월요일 A01면 종합

구직단념·장기실업자도 ‘역대급’

월평균 각 51만·14만4천명
통계작성 이래 가장 많아

일자리 상황이 악화하면서 아예 구직 활동을 포기한 사람들은 숫자가 올들어 기록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 분석에 따르면 올해 1~8월 구직단념자는 월평균 51만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 보다 2만6000명(5.4%) 많았다. 이는 현재와 같은 기준으로 통계를 작성한 지난 2014년 이후 가장 많은 것이다.

구직단념자는 취업을 원하고 취업 가능성이 있지만 노동시장과 관련된 이유로 최근 4주 동안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적당한 일거리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취업하려고 해도 일거리를 찾을 수 없어서 구직을 포기한 사람들이 여기에 속한다. 교육 수준이나 기술·경험 부족 등의 이유로 일을 구하지 못해 구직 단념자가 되기도 한다.

올해 1~8월 구직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이른바 장기실업자는 월평균 14만9000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8000명(6.0%) 늘었다. 이는 1999년 6월 통계 작성 이래 올해가 가장 많은 것이다.

외환위기 충격이 완전히 가시지 않았던 2000년 1~8월에는 구직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실업자가 월평균 14만4000명으로 올해보다 적었다.

장기실업자가 증가하는 최근 노동 시장의 흐름을 보면 앞으로 구직단념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장기간 취업을 시도했음에도 일을 구하지 못한 이들은 결국에는 체념하고 구직단념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민간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장기실업자와 구직단념자가 지금과 같은 속도로 빠르게 늘어나면 결국 고용 통계를 더욱 악화시킬 수밖에 없다”며 “고용 악화는 결국 소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만큼 향후 경기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연규욱 기자

“연봉공개는 구직자 알 권리” “中企 인력난만 심해질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모(55)씨는 이번 추석 때 “월급이 기대보다 너무 적어 얼마 전 회사를 그만뒀다”는 아들(28)의 말을 듣고 실망했다. 김씨가 “애초에 왜 지원했느냐?”고 핀잔을 줬지만, 아들은 생각이 분명했다.

“회사에 들어가기 전 채용 공고에 ‘임금은 내규에 따른다’는 문구가 있었어요. 출근 첫날부터 월급 얘기를 한 마디도 못 듣다가, 보름간 현장실습을 마친 뒤에야 월급을 알게 됐어요. 원하는 것 보다 너무 낮았어요.”

애써 직장 들어가고도 연봉에 실망해 곧 그만두는 젊은이들이 많다. 취업 준비생들은 구인·구직 사이트를 돌아다니며 많은 시간을 쓰지만, ‘초봉 3000만 원’ 같은식으로 급여를 속 시원히 밝힌 공고는 많지 않다. ‘임금은 회사 내규에 따름’, ‘협의 후 결정’ 같은 문구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애매한 공고를 보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6월 ‘구직자의 선택권과 알 권리 보장을 위해, 기업이 사람을 뽑을 때

권익위 “채용공고에 급여 알리도록 강제하라” 고용부에 권고

급여 수준이 얼마인지 구직자에게 반드시 알리도록 강제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고용부에 권고했다. 고용부는 내년 상반기 법안 제출을 목표로 연구 용역 등을 진행 중이다. 문제는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찮다는 점이다.

◇ “평생 다닐 직장, 연봉도 모르고 입사?”

지난 4월 국민권익위가 취업 준비생 2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보니, 응답자 네 명에 세 명꼴(76%)로 “임금이 안 적힌 취업 공고를 본 적 있다”고 했다. 대기업은 그나마 연봉이 대략 알려져 있지만, 중소기업은 깜깜이 공고가 많다. 구직자가 취업 사이트를 뒤지거나, 그 회사 직원을 수소문하는 수밖에 없다. 취준생이 “마트에서 장 볼 때도 가격 보고 고르는데, 임금도 모르고 직장을 택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발하는 이유다.

최근 중소기업에 들어간 최모(27)씨는 “나도 입사 전 지금 다니는 회사의 월급을 몰라 지인들 통해 간신히 알았다”며 “내가 취업했다는 소문이 나자, 초봉이 얼마인지를 묻는 후배의 전화가 끊이

지 않는다”고 했다. 이 때문에 서울의 한 사립대는 아예 졸업생들 직장을 조사해 놓고, 임금 수준이 궁금한 재학생 후배들과 연결해주고 있다.

◇ “기업들 ‘사람 따라 연봉 다른데…’”

하지만 재계에선 난색을 표하고 있다. “기업의 경영 정보를 공개하라고 국가가

“마트서 장볼때도 가격 보고 골라”

“미국·일본도 법으로 강제 안한다”

찬반 의견 팽팽해 정부도 고심 액수 대신 하한선 공개 등 검토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주요 회원국 중에 임금 공개를 법으로 의무화한 나라는 많지 않다. 미국·일본도 안 한다. 성별·인종별 차별 금지를 명시하는 정도가 대부분이다.

같은 자리라도 사람에 따라 실력이 천차만별인데, 일률적으로 연봉을 공개하

채용 시 임금 정보 공개해야 하나

찬성

취준생 알 권리 침해. 기업이 상대적 약자에게 ‘갑질’

임금 모르고 지원했다 금방 관두면 취준생·기업 모두 피해

임금 모르니 무작정 여러 곳 지원해 결국 ‘일자리 미스 매칭’

반대

민간 사이 계약인 채용에 국가가 개입하는 해외 사례 찾기 어려워

지원자마다 능력 제각각이니 임금도 다 달라야



중소기업 구인난 더 심해질 우려

는 건 맞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다. 특히 경력자가 그렇다. 한 대기업 인사 담당자는 “회계 담당자가 처음엔 ‘4000만원 쯤 줘야지’라고 생각했다 해도, 이력과 평판이 뛰어난 지원자에겐 5000만원도 안 아까울 수 있다”고 했다. 요즘은 대규모 신입사원 공채보다 맞춤형 경력자 채용 방식이 늘어나는 추세다.

연봉이 공개되면 안 그래도 구인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이 더 곤란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지금은 연봉을 모르고 찾아온 구직자에게 “당장은 적어도 같이 키워가자”는 식으로 설득할 수 있지만, 연봉이 공개되면 그마저 끊길 수 있다. 일부 중소기업 관계자는 “자칫하면 회사 평

판을 유지하기 위해 억지로 신입사원 임금 올려줘야 할 판”이라고 했다.

◇ 고심하는 정부

이처럼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는 사안이라, 정부도 ‘신입사원 연봉은 3420만원’처럼 구체적인 액수를 공개하는 방안은 곤란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대신 ‘3000만 원 이상’처럼 임금 하한선을 제시하거나 ‘3000만~3500만원’처럼 구간으로 제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어떤 방식으로 구직자와 기업들의 요구를 모두 만족시킬지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이기훈 기자

김승구 인턴기자(UCLA 정치외교학과 졸업)

김영준 인턴기자(성균관대 글로벌리더학부 수료)

문 대통령, 화해치유재단 해산 통보…아베에 “지혜롭게 매듭”

한·일 정상회담

회담 절반 ‘과거사 문제’ 논의
“12·28 합의 재협상 요구 안해
강제징용 소송은 사법부 존중”

1354번째 수요시위 참가자들
“완전하지는 않지만 추석 선물
10억엔 반환하고 법적 배상을”

문재인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각)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위안부 피해 할머니와 국민의 반대로 화해치유재단이 정상 기능을 못하고 고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지혜롭게 매듭지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위안부 협상 결과로 만들어졌으나 이사진 대부분이 사퇴하는 등 기능을 잃은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하겠다는 뜻을 일본에 통보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한 문 대통령은 이날 아베 총리와 55분 동안 한·일 정상회담을 한 자리에서 이렇게 밝혔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말했다. 문 대통령이 아베 총리에게 해산 필요성을 언급 한 만큼 화해치유재단은 신속하게 해산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화해치유재단은 2015년 12월 박근혜 정부가 체결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 출연금 10억 엔으로 세워졌다.

김 대변인은 “아베 총리가 회담에서 위안부 문제와 강제징용자 문제 등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화해치유재단 문제를 언급하면서도

“(기존의) 위안부 합의를 파기하거나 재협상을 요구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고 김 대변인이 전했다. 또 문 대통령은 “지난 (박근혜) 정부가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일제) 강제징용 관련 (손해배상 청구) 재판에 개입을 시도한 정황이 문제가 되고 있다. 강제징용 소송 건은 삼권분립에 비춰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이날 회담의 절반 정도는 위안부 피해자 문제 등 과거사 문제를, 나머지 절반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근처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열린 1354번째 정기 수요시위 참가자들은 2015년 한·일 합의 완전 폐기와 재협상까지 나아가지 못한 점을 아쉬워하면서도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반겼다. ‘일본군 성노예제(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가 주최한 행사에는 한가위 연휴 마지막 날인데도 시민 100여명이 참가했다. 윤미향 정의기억연대 대표는 “완전하지는 않지만 추석 선물이 됐다”며 “문 대통령이 사실상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할 수밖에 없다는 뜻을 일본 정부에 밝힌 것은 늦었지만 피해자 요구에 귀 기울인 한 단계 진전된 조치”라고 말했다. 정의기억연대는 지난 8월부터 ‘화해치유재단 즉각 해산’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해왔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지혜로운 매듭’이 어디까지를 의미하느냐에 대해선 논란의 여지가 있다. 위안부 피해자들과 정의기억연대는 일본 정부로부터 ‘위로금’으로 받은 재단 기금 10억엔을 반환하고 ‘법적 배상금’을 받아야 한다고 요구해왔기 때문이다. 윤 대표는 “피해자 인권과 명예 회복을 위한 후속 조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욕/김보협 기자, 황예랑 기자 bhkim@hani.co.kr



1354번째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가 한국천주교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주최로 26일 낮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리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서울 아파트 장만… 월급 한 푼도 안쓰면 15년, 안 그러면 30년

〈가계 흑자액 기준〉



장원석의 앵그리 2030

서울 집값 5년간 29% 오를 때
청년 가구 월 소득은 8% 늘어
4050가구와 격차도 점점 커져

집값 폭등에 청년층의 상실감이 커지고 있다. 소득 정체가 길어지는 상황에서 집값은 크게 올라내 집 마련 가능성성이 더욱 희박해진 탓이다.

26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전체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453만51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2% 늘었다. 그러나 청년 가구(가구주가 39세 이하)의 월평균 소득은 449만 1637원으로 0.5% 증가하는데 그쳤다. 40대(3.8%), 50대(7.3%)와 격차가 커졌다.

소득 중에서 세금·사회보험료 등 비소비지출을 제외하고 실제 쓸 수 있는 돈(처분가능소득)은 올해 2분기 361만5000원이었다. 전년 대비 도리어 1.1% 줄었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한 마이너스다.

노동시장에 진입한 지 얼마 안 된 20~30



대는 상대적으로 소득 절대액이 적다. 이 때문에 외국에선 20~30대의 소득 증가율이 전체 증가율보다 더 높게 나타나는 게 보통이다. 그러나 한국에선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엔 이런 공식이 통하지 않고 있다.

반면 집값은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한국감정원이 조사한 서울 지역 아파트 매매 중위가격은 6월 기준으로 6억6403만원이다. 산술적으로 청년 가구는 15.3년을 꼬

박 모아야 서울에서 중간 가격의 아파트 한 채 값을 마련할 수 있는 셈이다. 2014년 1분기에는 이 기간이 10년이었으나 2015년 4분기엔 12.3년으로 연장됐고 지난해 4분기에는 13.7년으로 길어졌다.

이는 최근 5년간 서울 주택 평균 매매가격은 28.8% 상승한 반면, 같은 기간 청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7.6% 증가하는데 그쳤기 때문이다. 소득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집값이 오르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

보니 내 집 마련에 걸리는 기간도 길어진 셈이다.

좀 더 현실을 반영하면 내 집 마련의 꿈은 더 멀어진다. 가계가 저축할 수 있는 돈은 처분가능소득이 아니라 소비지출을 제외하고 남은 '가계 흑자액'이다.

2016년 말 기준으로 소득 3분위(소득 상위 40~60%) 가구의 가계 흑자액은 84만 원이다. 이 돈을 연 2.5% 적금에 가입해 모으고, 해마다 가계 흑자액이 5만원씩 증가한다고 가정해도 6억6403만원을 모으려면 약 30년이 걸린다.

직장인 유지환(34) 씨는 "증여나 로또 당첨 같은 이례적인 이벤트가 없다면 30년 이상을 집 하나에 옮ين해야 하는 게 현

실"이라고 말했다.

소득 정체의 출발점은 고용 불안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실제로 청년이 제때, 괜찮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면서 스스로 소득을 창출해 내는 시기가 늦어졌다. 이런 현상은 2009년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해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소득 부진이 명확해진 시기와 일치한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고용장려금 등 근시안적 대책 보다는 대·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 등 구조적인 문제를 손대야 한다"며 "과감한 규제 완화로 기업의 투자 심리 회복을 유도하고, 노동 시장 개혁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jang.wonseok@joongang.co.kr

2018년 09월 22일 토요일
A11면 산업

SK텔레콤 ‘노사의 결단’

기본급 인상분 30% 사회와 나눈다

SK텔레콤과 SK텔레콤 노동조합은 2018년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하고 기본급 인상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재원으로 출연하기로 했다고 21일 발표했다.

노사는 이날 2.5% 임금인상률에 합의했으며 출연금을 제외하면 실제 2.1%만 기본급 인상에 반영된다. 사측도 직원과 동일한 금액을 출연해 연간 약 30억원의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SK텔레콤은 노사가 마련한 재원을 장애인의 자립과 삶의 질 향상에 우선 쓸 방침이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통한 물품 구매, 복지시설 지원, 장애인 기본권 향상을 위한 기술 및 서비스 활용 등의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경제적 가치와 더불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는 최태원 회장의 경영 방침과 박정호 사장이 취임 이후 강조한 ‘고객에게 더 사랑받는 회사’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에 노사가 전폭적으로 동참하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김태훈 기자 taehun@hankyung.com

2018년 09월 22일 토요일 A27면 오피니언

일자리 말라가는데 ‘광주형 일자리’ 반대하는 노동계

광주시가 추진 중인 ‘반값 연봉’ 자동차 공장 건설 사업이 노동계 반발로 좌초 위기에 처했다고 한다. 이 사업은 광주시와 현대자동차 등이 투자해 자동차업계 평균 연봉의 절반 정도 수준 일자리를 만드는 프로젝트다. 노조와 시민단체, 사용자, 정부 등 노사민정 합의를 기초로 적정 임금과 노동 시간 등을 결정하는 구조다. 민주노총은 처음부터 빠졌고 한국노총이 논의에 참가해왔다. 그런데 지난 19일 한국노총이 보이콧을 선언했다. 광주시 생활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2100만원으로 초임 연봉이 책정됐다는 게 불참 이유다. 한국노총이 빠지면 노사민정 대타협에 의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업의 기본 구상이 무너지게 된다.

한국노총 주장에 대해 광주시는 “구체적 임금은 경영 수지 분석을 통해 결정될 사안이지만 3000만원에서 4000만원 사이가 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3000만~4000만원은 이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연봉이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몇 년 전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 결과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처음 제안됐다. 대학생들은 평균 연봉이 3600만원 정

도인 대기업 일자리를 원했다. 청년들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임금 경쟁력을 높여 제조업 공동화를 막을 수 있다면 그보다 좋을 수 없다.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이 된다. 한국노총은 노사민정 논의 틀에서 합리적인 연봉이 책정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근거도 불명확한 초임 2100만원설을 주장하면서 일방적으로 보이콧을 선언해버린 것이다.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정규직 노조의 불편한 심사가 반영된 행태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정규직 노조는 광주형 일자리가 성공적으로 안착·확산되면 동일 직군의 임금 하향 평준화를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고 경계한다. 자동차 노조가 특히 그렇다. 이는 자동차 산업 임금이 노동의 시장가치가 아니라 노조 운동에 의해 결정돼 왔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노동시장에는 3000만원 연봉에도 일하고 싶어하는 청년들이 줄을 서 있고 기업들의 수요도 있다. 오직 기득권 노조 훼방으로 청년들은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기업들은 임금 경쟁력을 높일 기회를 놓치고 있다.